

브렉시트(BREXIT) 결과가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 및 시사점

허종원 과장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소피아 무역관

■ 주요 내용

-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탈퇴가 51.9%로 향후 유럽 연합에 다양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것임
- 불가리아 정부는 브렉시트에 결과에 대해 영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되 영국이 EU 탈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강한 유럽연합 구축에 대한 의지 표명
- 불가리아-영국 간 교역, 투자, EU 기금 집행 관련 내용을 분석하고 향후 미치는 전망에 대해 다각도 분석
- 브렉시트에 따른 국제정세 및 경제상황이 변동 되겠지만 향후 영국-EU 간 협상 추이를 지켜봐야 함

KIEP 대외경제정책연구원
Korea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 Policy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70
세종국책연구단지 경제정책동
TEL 044-414-1076 E-MAIL emerics@kiep.go.kr
http://www.emerics.org/ http://www.kiep.go.kr/

EMERiCs의 사전 동의 없이, 상업 상 또는 다른 목적으로 본 동향제미나의 내용을 전재하거나 제3자에게 배포하는 것을 금합니다.
본 이슈분석에 대한 저작권 책임은 연구진 본인에게 있으며 KIEP 및 EMERiCs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1 브렉시트(BREXIT) 개요

☐ **영국의 EU 탈퇴(Brexit, 브렉시트)는 2015.5월 영국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의 공약 중 하나로 재 집권시 브렉시트에 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하면서 공론화 됨**

- 2013.1월 캐머런 총리는 EU내 영국의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협상 추진 및 브렉시트 국민투표를 선거 공약으로 제시하였으며 2015년 5월 총선에서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이 과반수 의석 차지(50.8%)
- 2015.11월 캐머런 총리는 도널드 투스크(Donald Tusk) EU 정상회의 상임의장에게 공식 서한을 보내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4가지 요구 조건을 전달
 - ① 이민자 복지혜택 제한, ② 영국 의회의 자주권 강화, ③ EU 규제에 대한 영국의 선택권 부여, ④ 비유로존 국가의 유로존 시장 접근 보장
- 2016.2월 EU 정상회의에서 영국 내 이민자들에 대한 복지 혜택 축소 및 영국의 자주권 등에 관한 합의를 하였으며 브렉시트 여부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 예정일 발표

표 1. 브렉시트 관련 주요 일지

시기	내용
2013.1.23	■ 캐머런 총리, EU와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협상 추진 및 브렉시트 국민투표 시행을 2015.5월 총선 공약으로 제시
2015.5.7	■ 캐머런 총리가 이끄는 보수당, 총선에서 과반의석(331/650) 획득
2015.11.10	■ 캐머런 총리, 영국-EU 회원국 지위 조정을 위한 4가지 요구조건을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에게 공식 전달
2016.2.2	■ 도널드 투스크 EU 상임의장, 영국측 요구안을 대폭 반영한 EU측 제안을 제시
2016.2.19	■ EU 정상회의에서 브렉시트 저지를 위한 협상안 타결
2016.2.20	■ 캐머런 총리,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일(6.23일) 발표
2016.4.15	■ 브렉시트 국민투표 공식 선거운동 시작
2016.6.23	■ 브렉시트 국민투표 실시결과 (찬성 51.9%, 반대 48.1%)

자료 : 언론사 등 종합(한국은행 자료 재작성)

☐ **브렉시트는 유럽 재정위기를 계기로 촉발되었으며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과 과도한 EU 분담금 및 역내 무역적자 심화 등 영국의 어려운 경제 상황을 이유로 심화되었음**

- 브렉시트의 주된 이슈는 EU에 대한 영국 내 정치여론, 이민자들에 대한 부정적 인식, EU내 영국의 낮은 위상, EU 분담금 부담 및 과도한 규제임.

- 영국은 EU 통합 시 국민투표를 실시하지 않았으며 그 동안 국민들의 불만이 축적되어 왔음.
 - o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Maastricht Treaty)¹⁾ 체결 당시 프랑스, 아일랜드, 덴마크는 국민투표를 실시하였고, 2005년 EU 헌법조약²⁾에 관해 네덜란드와 프랑스가 국민투표를 실시하였음.
 - o 2005년 프랑스와 네덜란드에서 EU 헌법 조약에 관한 국민투표 결과가 부결로 무산되어 2007년에 리스본 회의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EU에 대한 최종 합의를 하였으나, 캐머런 총리는 당시 영국 노동당 정부가 국민투표 과정을 거치지 않은 점을 비판
- EU 역내 거주와 노동의 자유 때문에 EU 회원국 출신 이민자수가 크게 증가하고 이들과 일자리 경쟁, 복지지출 증가 등으로 인한 영국민의 불만 증대
 - o 2004년 이후 불가리아를 포함하여 13개국이 새로 EU에 가입하면서 영국에 EU 회원국 출생자 수가 급증(2004년 149만 명 → 2015년 313만 명)
 - o 취업을 목적으로 영국으로 이민을 선택한 인구는 2012.6월 17.3만 명에서 2015.9월 29.0만 명으로 크게 증가 추세이며, 영국 총인구 대비 EU 회원국 국적자 비중은 2015년 기준 4.6%로 가장 높음(독일 4.3%, 스페인 4.2%)
- 영국은 19세기 초반까지 대영제국으로 불리는 등 독자적인 강자였으나 EU가 통합을 강화 하고 각국의 자치권을 줄여가는 것에 대해 반대함에 따라 EU 내에서 영향력이 점차 감소되고 있음.
 - o 영국은 1999년 유럽경제통화동맹(EMU, European Economic and Monetary union)과 2011년 신재정협약(European Fiscal Compact) 참여를 거부하는 등 EU의 통합강화에 지속적으로 반대
 - o 2016.2월 EU 정상회의에서 ‘더욱 긴밀한 공동체(ever-closer-union)’ 조항의 영국 적용 제외 및 차기 조약 개정 시 동 내용의 명시화하기로 하였으며 회원국의 의회 거부시스템(Red Card)³⁾을 도입하는 등 자치권 강화 관련 내용이 포함됨.

6월 23일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 EU 탈퇴 51.9%, 잔류 48.1%

- 진보적 노동당을 중심으로 18~34세의 젊은 층은 EU 잔류, 노년층(연금 수급연령인 65세 이상)은 탈퇴를 주장하였음.
 - o 영국 청년 실업률은 14.6%로 EU 연합 평균을 넘는 수치지만 젊은 층은 EU 평화와 공존을 어릴 때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하였으며 자연스럽게 EU에서 이동하고 모든 인종과 종파를 아우르며 지내음.
 - o 반면, 과거 대영제국의 영광 속에서 젊은 시절을 보내왔던 장·노년층은 EU 가입으로 인해 영국이 얻은 것 보다 잃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는 등 강한 영국에 대한 향수병이 여전히 작용 한 것

1) 유럽공동체(EC)에서 정치, 경제적 통합인 EU로 나아가기 위한 기반을 제공한 조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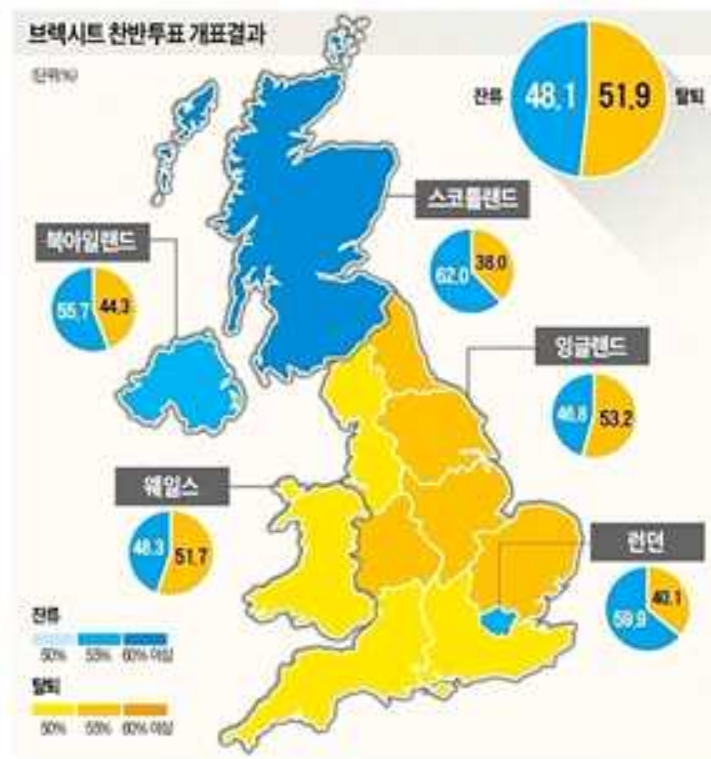
2) Treaty Establishing a Constitution for Europe, 리스본 조약의 전신

3) 회원국 의회의 55%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입법 절차 중단 가능

으로 보임.

- 영국 투표 결과 스코틀랜드와 북아일랜드를 중심으로 한 영연방 북쪽은 EU 잔류지지, 잉글랜드와 웨일즈 중심으로 한 남쪽은 탈퇴를 지지함.
 - 각 지역별로 소득 격차가 심해지면서 이에 대한 해결이 브렉시트라고 판단한 사람이 많았으며, 경제적 수준이 높거나 일정 소득을 유지하는 지역일수록 EU 잔류 지지율이 높고 서민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층과 공장 근로자 밀집 지역에서는 EU 탈퇴를 강하게 주장했음.
 - EU 잔류를 원하는 지역에서는 EU 회원국과 보다 많은 자유무역, 수교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조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경제적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 EU 잔류를 원하는 지역에서는 EU 회원국과 보다 많은 자유무역, 수교 그리고 이민정책 등을 통해 값싼 노동력을 조달하고 지역 발전을 도모 할 수 있는 경제적 동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판단

그림 1. 브렉시트 찬반투표 개표결과



자료 : 자료원 확인 중

2

브렉시트(BREXIT)가 불가리아에 미치는 영향

☒ (불가리아 정부와 주요 인사 반응) 불가리아 정부 및 주요 인사들은 브렉시트에 결과에 대해 영국민의 결정을 존중하되 영국이 EU 탈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하고 더 강한 유럽연합 구축에 대한 의지 표명

- 현재 유럽 연합의 지역별 불균형, 난민 문제 등에 더해 브렉시트는 유럽연합을 더 많은 문제에 노출 시킬 것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유럽연합 회원국 간 연대를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불가리아 대통령, Rosen Plevneliev)
- 브렉시트로 유럽 연합의 구성력이 약화되고 파운드(£)의 환율 변동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및 주변국들은 이 충격에 노출 되지 않기 위해 강력한 협력 필요하다고 주장(불가리아 총리 Boyko Borisov)
- 브렉시트가 불가리아에 장기적으로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겠지만 대외경제 의존도가 높은 불가리아의 경우 당분간 시장 혼란과 대 변동이 예상되는 만큼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언급(불가리아 재무장관 Vladislav Goranov)
- 브렉시트를 계기로 EU 회원국 리더들은 관료주의 철폐와 비즈니스 환경의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철폐하고 경쟁력 있는 경제환경 구축을 위해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고 언급(불가리아 외교장관 Daniel Moto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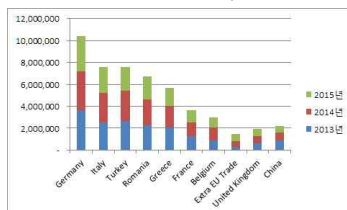
☒ (불가리아-영국 사회 경제적 영향 분석) 불가리아의 주요 교역 국가는 EU, 러시아, 중국인데 EU 중에서도 영국과의 교역량이 많지 않아 브렉시트로 인한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할 것으로 전망

- 2015년 기준 불가리아의 국가별 무역현황을 보면 교역 상위 15개국 중 12개의 EU 회원국과 교역 중
 - 과거 공산권 시절 러시아 및 동구권 국가들과의 교류가 많았고 2007년 EU 가입 이후 독일 등 EU 국가와 주로 거래하고 있음.
 - EU 역외 회원국을 보면 불가리아는 러시아로부터 원유를 수입, 정제 후 수출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1위 교역국이었던 러시아와 지속적인 거래를 하고 있으며 국경을 접하고 있는 터키 그리고 중국이 주요 거래국 임.
- 2015년 기준 영국은 불가리아 교역량의 2.2%(15위)를 차지하며 불가리아의 對 영국 수출이 2.5%, 수입이 1.8% 수준 임.

- 對 영국 수출액은 6.5억 달러, 수입액은 5.3억 달러로 지난 3년간 지속적인 적자를 유지하고 있음
- 불가리아는 제조업 기반이 부실하여 대부분의 공산품을 유럽 회원국에서 조달하고 있지만 영국은 불가리아의 주 교역국이 아니며 브렉시트가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미비 할 것으로 보임.
- 영국이 EU 탈퇴로 관세율, 산업규제 항목 등에 대해 향후 논의가 진행 될 예정이지만 EU와의 협상 결과 영국이 EU 국가와 과도한 관세, 인증 및 규제를 주장하면 시장이 작고 가격에 민감한 불가리아 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함.

표 2. 불가리아 수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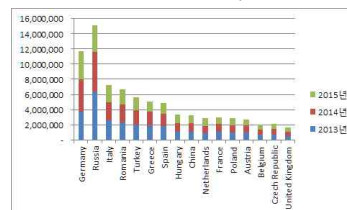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표 3. 불가리아 수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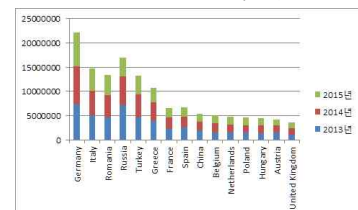
(단위: 천 달러)



자료 : Global Trade Atlas

표 4. 불가리아 교역량

(단위: 천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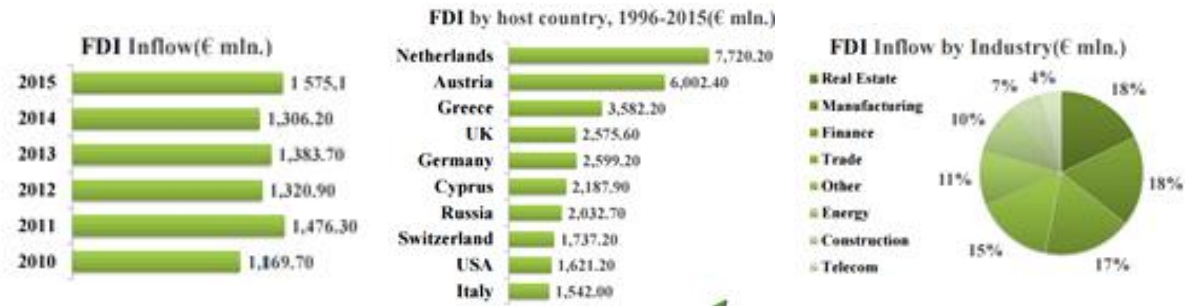


자료 : Global Trade Atlas

☐ 영국의 對 불가리아 직접투자(FDI) 누적금액은 2,575백만 유로로 4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영국 경제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가 위축 및 투자금 회수 가능성 존재

- 2015년 기준 불가리아 FDI 금액은 1,575.1백만 유로이며, 최근 5년간 평균적으로 1,412백만 유로를 투자 받음
 - 불가리아는 2007년 EU 가입 후 서유럽을 소비시장화 하고 동유럽을 생산기지화 하는 동진 (Eastern Europe-Tun) 사업의 일환으로 외국인 투자자 증가하였으나 2009년 국제 금융위기 등으로 인해 다소 침체 되었으나 2015년에 들어 증가 추세를 보임.
 - 1996~2015년 국가별 누적 투자 금액은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그리스에 이어 영국이 2,575.60 백만 유로로 4위를 차지함.
 - 2015년 기준 영국이 투자한 금액은 12.5백만 유로로 지속적인 투자 중
- 영국은 세계 2위 서비스 산업 수출국이고 영국 총 부가가치 중에서 서비스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약 80% 정도로 높아 브렉시트 결과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부분이 금융을 중심으로 한 서비스 분야임
 - 브렉시트 결과로 서비스 산업에서만 약 40만 개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분석되고 서비스 산업의 둔화는 對 불가리아 투자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존재
 - 또한, 영국 경제에 불황이 올 경우 불가리아에 이미 투자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부실기업 판매 등 사업을 축소 할 경우 불가리아에 큰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음.

표 5. 불가리아 투자 동향



자료 : 불가리아 투자청

EU 기금의 수혜국인 불가리아에서 EU 기금 감소에 따른 경제 불황 가능성

- EU는 EU 회원국간 사회·경제적 결속을 강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고용창출을 위해 EU 기금을 7년 단위로 배정하고 있으며 브렉시트 영향으로 EU 기금 집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불가리아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
 - 불가리아는 2단계 EU 기금을 98.4억 유로 배정 받았으며, 2014~2020년 동안 인프라 개선, 환경보호,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각 프로젝트 별로 재원을 사용 할 예정⁴⁾
 - 영국은 2015년 약 177.8억 파운드를 부담하고 수혜금은 44.5억 파운드에 불과하여 EU 회원국 중 3번째⁵⁾로 많은 부담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수혜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EU와의 탈퇴 조건 협상 결과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영국이 EU 분담금을 대폭 줄이거나 사라질 수 있음.
 - EU 예산 변동에 따라 불가리아에 배정된 기금이 줄어들 경우 EU 기금을 활용하여 시행 예정이었던 인프라 개발 및 건설 공사 등의 프로젝트 기한 연장, 취소 등으로 인해 불가리아 경제에 약 영향을 미칠 수 있음.

브렉시트 논쟁의 핵심 중 하나는 영국의 국경통제권 회수에 의한 이민자 통제였으며 EU 시민권을 가진 불가리아 국민들의 향후 행방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캐머런 총리는 EU 집행위와의 협상에서 영국의 연간 순 이민자 수가 30만 명에 달해 학교, 병원 등 여러 공공서비스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그 대안으로 이민자 복지 제한을 요청해 고용 후 4년간 근로 복지 혜택 제한이 수용되었음.
 - 브렉시트가 가결됨에 따라 EU 역내 거주자의 자유가 영국에 더 이상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향후 EU내 이주자들도 영국의 이민통제를 받을 것으로 예상

4) 자원별 배정된 기금 : 구조결속 기금(CF) 22.7억 유로, 유럽지역개발 기금(ERDF) 35.7억 유로, 유럽사회 기금(ESF) 15.2억 유로, 농촌개발 기금(EAFRD) 23.4억 유로, 해양어업기금(EMFF) 88백만 유로, 청소년 고용(YEI) 55백만 유로 등 총 98.4억 유로이며, 유럽 네트워크(CEF)와 관련된 기금은 약 23억 유로가 배정

5) EU 예산 순 분담률 순위 : 독일(1위, 21.36%), 프랑스(2위, 15.72%). 영국(3위, 12.57%)

- 영국 시민권을 가진 불가리아 사람은 2014년 말 기준 6.5만 명이며 학생 및 단기 일자리를 찾아 거주하는 인구는 약 46.8만 명으로 추정됨
 - 사회주의 이후 불가리아 대학들의 경쟁력은 줄어들어 불가리아의 많은 학생들이 영국, 독일 등 서유럽으로 유학 가는 현상이 계속 됨(2011년 기준 약 8만 명의 불가리아 학생들이 외국에서 교육).
 - 특히 영국은 영어 사용 국가로 불가리아 학생들의 접근이 쉽고 세계적인 교육 수준 및 시스템, 불가리아 학생들의 학자금 대출 제도가 잘 완비되어 있으며 불가리아 기업에서도 영국에서 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대해 우대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학생들이 영국에서 공부하고 있음.
 - 더불어 불가리아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이 400유로 밖에 되지 않아 소득수준이 낮는데 영국에서 근무 할 경우 높은 임금과 사회보장제도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일자리를 찾아 영국으로 가는 사람들이 많음.
- 중동 및 북아프리카 난민문제 뿐만 아니라 불가리아, 루마니아 등 동유럽 국가 국민들의 영국 이주 인구가 증가로 영국인들의 불만이 고조되는 가운데 브렉시트 결과 불가리아 국민들의 향방에 대한 안정성 확보 필요
 - 이민자 증가에 따라 영국 청년들의 실업률 문제, 인종·민족주의로 인한 사회적 차별 등 동유럽 국가에 대한 차가운 시선을 보내는 사람들이 많음.
 - 실제로 불가리아로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으며 일정기간 이후 다시 불가리아로 복귀하는 사람들도 증가함.
 - 영국과 EU의 협상에 따라 EU 시민권자들의 영국 내 합법적 거주에 대한 향방이 정해질 예정이며 불가리아 국민 안전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 필요

3 전망과 시사점

❑ 브렉시트 찬성으로 인해 불가리아 경제에 미칠 영향은 향후 영국-EU 간 탈퇴 협상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임

- 영국 정부의 EU 탈퇴는 리스본 조약 50조에 탈퇴 조항에 따라 진행 될 것이며 동 규정의 절차에 따르면 영국은 EU와 비EU 국가로서의 관계 재설정을 위해 2년간 EU 집행위원회와 관세, 무역, 국경 문제 등에 관한 쟁점을 협상하게 되어 있음.
 - 탈퇴 협상이 기한 내 마무리 되지 못할 경우 기존 EU 회원국으로서 누리던 권리 등이 자동적으로 소멸 되며 2년 동안 협상이 타결되지 않을 경우 27개국 회원의 만장일치 승인이 필요
 - 브렉시트 결과에 따라 EU 회원국은 조속히 탈퇴 절차를 밟을 것을 요구하고 있고 EU 집행위원장은 투표 시작 전 영국이 EU를 나갈 경우 재협상은 없다고 언급하긴 하였으나 GDP 기준으로 세계 5위인 영국의 시장을 EU가 무시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양측 간 조속한 협상이 향후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할 것으로 보임.
- 불가리아는 EU 회원국과 거래량이 많으며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로 제2의 유럽 경제위기가 찾아올 경우 불가리아 경제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불가리아와 영국 간 교역량이 많지 않아 브렉시트가 직접적 영향은 미비 할 것으로 보이지만 EU-영국 간 협상 결렬 혹은 EU에게 불리하게 협상이 진행 되면 불가리아는 간접적인 영향에 노출 될 것으로 보임.
 - EU 기금을 활용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불가리아의 경우 EU 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건설 프로젝트의 중단, 경제 위기로 인한 투자 심리 위축 등은 불가리아에 충격을 줄 가능성이 있음.

❑ 영국 탈퇴에 따른 국제정세가 변동될 가능성은 많지만 불가리아는 여전히 친 EU, 미국과 함께 할 것으로 보임

- 2007년 불가리아, 루마니아가 당시 EU 회원국에 비해 경제수준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EU 회원국으로 가입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유럽 국가들을 러시아의 영향권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함이었음
 - 21세기 신 양극체제는 NATO를 한 축으로 하고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SCO를 다른 축으로 대립양상을 표현하는 것인데 이는 냉전시절 이념으로 대립했던 것과는 달리 경제 논리에 몰입된 국제 안보 구도임.
 - 영국 탈퇴로 인해 EU 안보에 균열이 생길 경우 러시아를 위시한 SCO 세력에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
 - 브렉시트 결과 이후 불가리아 정부는 지속적으로 더 강력하고 새로운 유럽연합을 구성해야 한

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러시아의 영향력이 불가리아에 강하게 미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적을 것으로 보이며 향후 신규 수요 발굴을 통한 불가리아 진출 가능성 존재

- 한국과 불가리아는 교역량이 EU 국가 중에서도 낮은 수준으로 브렉시트 결과로 인해 양국 간 교역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임.
 - 다만, 불가리아는 유로화와 고정 환율(1유로:1.95레바)을 유지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의 혼란으로 인한 환율 변동에 대비해야 함.
 - 불가리아-영국 간 교역량은 많지 않지만 EU와 협상과정이 길어지거나 불가리아 수입자가 불리한 협상 결과가 나올 경우 우리 기업에 유리한 신규 수요 발생 가능성이 존재함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음. **EMERiCs**

출처

- 2016 브렉시트 국민투표 결과와 시사점, KOTRA
- 브렉시트의 경제적 영향과 정책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영국의 EU 탈퇴(Brexit) 논란 배경, 가능성 및 영향, 한국은행
- 브렉시트(Brexit) 동향과 향후 전망 : 정치적 함의를 중심으로, 국립외교원 외교안보 연구소
- Political Risk Analysis - Brexit : Implications for Nato and Russia, EMIS
- HM Treasury Analysis : the long-term Economic Impact of EU Membership and the Alternatives, HM Government